

성공적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올해는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시장 참여자들의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연히 나침반은 안정되어야 한다. 5년마다 가리키는 방향이 뒤바뀌면 시장 참여자들은 길을 잃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히 수립되어야 하고, 5년마다 재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수정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올해 예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완전히 새롭게 수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최대 목표는 정부가 작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신재생과 가스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목표다. 당연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 2차 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될 수 없다. 따라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앞선 계획보다 훨씬 더 신중히 수립되어 향후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이미 작년 12월에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전력부문에서 원전과 석탄의 비중은 줄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이전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그림의 중요한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최상위 에너지 계획으로서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안정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각 에너지원별 그리고 부문별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세제 등 제도적 설계에서는 환경적 외부성에 대한 고려가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그동안 수립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과거와 달리 이번 워킹그룹 구성에서 갈등관리·소통 분과를 신설된 것이 이러한 기대의 근거다. 물론 조직이 신설되었다고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그 취지에 맞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며 분과위원들의 균형적인 시각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적 구성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진정 갈등관리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자 한다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에너지계획들은 사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도 부정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고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탈바꿈되어 결국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기로 시간적 낭비로 느껴지겠지만 시간과 공을 들여 온전한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보다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고려는 되고 있겠지만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을 에너지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기술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에너지시장 활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